

[종합·해설]

공대위-추진단, 문화전당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

■ 해법 없나

“별도 장소 복원·설계 변경 등 대안 놓고 머리 맞대라”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사업자질이 빚어지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광대위)와 전당 건립 주체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먼저 광주의 미래비전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속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양측이 ‘철거불가와 철거방침 고수’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별관 철거 후 별도 장소복원’, ‘별관 철거 후 모형 전시’, ‘전당 설계 변경’ 등 별관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청 별관 청점=도청 별관은 일제 시대(1920~30) 때 지어진 본관 건물과 잇닿아 있으며, 지난 1975년 4층 콘크리트 건물로 증축됐다. 별관 건물은 지난해 말 완료된 문화전당 설계상 철거 대상 건물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5월 관련 건물은 상무관, 도청 별관, 도청민원실, 경찰청 본관, 경찰

공대위 “광주 항쟁 숨결 남아 있는 현장… 보존 필요”

추진단 “별관 허물어야 출입구 확보·설계 개선 살려”

청 민원실 등 5개 건물을 보존이 확정돼 있다.

그러나 5월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된 광대위는 별관철거를 반대하며 3월에 옛도청 부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수만 광대위 상임위원장은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항쟁 숨결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도청과 한 덩어리인 본관을 하문 뒤 그 부지를 문화전당의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추진단은 “별관을 존치할 경우 재설계가 불가피해지는 등 전당조성사업 전체 공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맞서고 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별관 철거는 이미 시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문제로, 별관을 허물어

야 문화전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확보하고, 열린 공간이라는 건축 설계 개념을 살릴 수 있다”며 철거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핵심 핵심은 별관 철거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다. 광대위는 상무관, 도청본관, 도청민원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등 5개 건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별관 철거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다는 주장을 평고 있다.

하지만 추진단은 “지난 2006년 5월 일부 관련 단체들이 제출한 ‘광주항쟁 보존 공간 활용 방안 제안서’에 별관이 철거대상 건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대위는 제안서 자체가 작성·제출한 사람�이 없는 가공의 문서라는 주장을 평고 있다.

◇대안은 없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대위가 당초대로 철거와 보존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현재 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당초 양측은 이달 중 별관 철거논란에 대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논의의 주제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해 날짜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경우 대안이 없지 않다는 게 문화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우선 시급한 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위해 별관을 철거한 뒤 나중에 별도 장소에 복원하는 것도 고려 대상의 하나다.

별관을 철거하되 건물의 모형을 제작해 문화전당의 민주평화 교류원이나 상무관에 전시하는 방법도 대안으



로 거론되고 있다. 또 추진단도 문화전당 설계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별관을 존치하는 설계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계의 한 인사는 “별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결코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 양측이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해결점을 찾는 열린 자세가 절실히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angju.co.kr

“별관도 유적지, 철거 말도 안된다”

정수만 도청 보존 상임위원장



반대해왔다. 우리

의 주장은 문광부

를 포함해 아시아

문화전당추진단

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

청 보존을 위한 공

동대책위’가 장기

농성을 펼칠 수 밖

아. 전체가 옛 도청건물인데 따로 별관을

분리해 철거한다는 것은 철거를 위한 논리

일 뿐이다.

역사성을 살려 보존된 건물들이 세계적

인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은 상식이다.

독일 베를린의 빌헬름 교회는 전쟁의 과파성을

알리기 위해 과파된 채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폴란드의 우슈우비츠 수용소 등은

보존을 통해 명소가 된 곳이다.

별관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전당의 설계를 변

경하면 된다. 이미 문화전당 건물 설계자

인 우규승씨는 5월 단체관계자들을 만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별관 보존이

결정될 경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

히기도 했다. 이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5월의 정신이 서린

유적을 과파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대

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80년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공간

인 별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짓

는 것도 아니고 문화전당의 출구로 사용한

다는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월 단체들이 문화전당의 건립을 뒤늦

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데

이는 타무니 없는 오해다. 5월 관련 단체들

은 그동안 끊임없이 도청 별관의 철거를

“설계변경땐 사업 공정 차질 불가피”

이병훈 亞문화도시추진단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전당의 새로

운 가치에 주목하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

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은 랜드마크

논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익들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수많은 논란 끝에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공식까지 마쳤으

며 전당 건립공사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다.

5·18기념타격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도청별관을 보존하자는 천막시위가

석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도청별관은 민주화의 성지로서 5·18

정신을 담은 소중한 역사 현장임에 틀림없

다. 같은 도청별관이 보존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옛 도청 본관, 도청민원

존치시에는 설계개념은 전면 제고되어야 하고 공간의 연계구도 등으로 인해 건물의 전면 재배치 등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공기연장 또는 중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현 설계안의 총 설계기간은 18개월, 설계비용은 220억원이 소요됐다. 재설계시 최소 1~2년의 설계기간이 걸린다. 공사시기 및 내용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공사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익을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진 않겠지만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가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5·18의 가치를 물리적인 공간에 만 풀 것이 아니라 5·18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해갈 수 있는 전당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확대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낙국을 해소하는 보다 큰 해법이라고 믿는다.